

#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 A Primary Study on Preference of Fertility Policies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Marriage and Having a Child\*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부교수 장진경

Dept. of Family Resources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 Chang, Jin-Ky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the lowest in the world. A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will result in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long ter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study a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ertility polici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resulting social problems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examination into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an investigation of the needs for fertility polic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study subjects were consisted of 769 unmarried people aged from 18 to 40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04 an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vealed. First, unmarried people in general had positive perspectives about getting married, giving birth, and being a parent. In addition, the primary cause of low fertility rate was economical difficulties for raising a child. Third, unmarried people thought tha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result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a society. Fourth, policies for economical supports for raising children, establishing social atmosphere for gender equality, and trustful public educational systems were the political alternatives that people really wanted for having a child in the future.

Corresponding Author: Chang, Jin-Kyung, Associat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Family Resources Management  
College of Human Ec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ungpa-Dong 2-Ka, Youngsan-Ku, Seoul, 140  
742 Korea Tel: 82-2-710-9805 E-mail: jinkyung@sookmyung.ac.kr

\* 본 연구는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짐.

Effective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section.

**주제어(Key Words):** 출산정책(fertility policies), 저출산현상 인지(awareness of low fertility rate), 미혼남녀 (unmarried people)

## 1. 서론

### 1. 문제제기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 대체출산율(replacement total fertility rate)이 2.1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안명옥, 2004). 한국은 1985년 이후 출산율이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2.1명)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여성 한 사람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04년 현재 1.16명에 이르게 되면서 저출산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통계청, 2004). 이러한 저출산국가로의 진입은 100년에서 1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출산율이 현재 시점에 도달한 프랑스나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의 출산율은 불과 20년에서 30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계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정치·경제·사회·행정)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저출산의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전광희, 2002; 전광희, 2003; 이춘석, 2003), 저출산의 위기의식 관련연구(김현미, 2001; 김혜수, 2003; 배현정, 2003; 조계완, 2003),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관련 연구(강복화, 2003; 권태환, 김승권, 박상태, 송위섭, 은성호, 최병호, 2000; 김승권, 2002; 김승권, 2003; 백승홍, 2003; 옥선화, 2003; 유애광, 김인숙, 2002; 이삼식, 2002; 장혜경, 2003; 정민자, 2004; 최경수, 200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발표된 연도에서도 나타나듯이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가 확산되면서 저출산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다소 추상적이며 계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현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일부 선행연구는 기초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해결방안으로 육아수당제나 출산휴가제도 등에 대한 단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국가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출산정책이다(김승권, 2003). 그러므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과 그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반인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변화라 생각하며, 특히 합계출산율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본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해결주체,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출산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안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미혼남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정책에서 수정·보완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현 정부의 출산정책과 더불어 미래 어떠한 출산정책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여 미래 출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혼남녀는 현 저출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미혼남녀는 현재 시행중인 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5 미혼남녀는 미래 대안적 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기보다는 저출산 현상과 출산율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이 초래할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제시적 성격의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자 한다.

###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은 2.1명이다. 이는 가입여성(15-49세) 한 명이 2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가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2.08로 이미 대체출산율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 계속 낮아져 1987년에 1.55명으로 떨어진 후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2년 1.78명으로 상승하였으나,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2년에 1.17명으로 나타나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대표되는 독일(2001년 1.29명)과 이탈리아(2001년 1.24명)보다도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의 평균출산율(1.7명)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저출산의 장기적 지속으로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저연령층 인구(0-14세)와 노동력의 공급원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노인인구(65세이상)의 규모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저출산율의 지속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사회보험제정을 포함한 복지부담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고, 이미 1996년 복지중심의 신인구정책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또한 결혼기피 경향으로 20대 미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출산율의 감소추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0년대 초까지 40% 이상수준에서 80년대는 30%~40%수준, 90년 25%수준에서 계속 낮아져 2003년 20.3%, 2010년에는 20%이하로 내려가 2019년에는 14.1%로 65세이상 인구비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1 참조).

〈표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03	2010	2030	2050
총인구	32 241	38 124	42 869	47 008	47 925	49 594	50 296	44 337
남 자	16 309	19 236	21 568	23 667	24 126	24 933	25 046	21 752
여 자	15 932	18 888	21 301	23 341	23 799	24 662	25 250	22 585
성 비	102.4	101.8	101.3	101.4	101.4	101.1	99.2	96.3
인구성장률	1.99	1.57	0.99	0.71	0.57	0.38	-0.24	-1.04

주 : 1) 인구성장률은 당해년에서 다음년까지 증가분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표 2〉 출산순위별 출생순위

연 도	출 산 순 위				
	총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1971	1,024,773	253,1460	219,455	184,788	328,206
1975	874,869	288,175	233,997	153,409	171,567
1980	865,350	342,093	271,583	145,149	106,388
1985	662,510	388,476	247,209	49,706	21,893
1990	658,552	349,319	253,835	39,935	9,819
1995	721,074	346,119	308,761	53,940	7,553
1999	616,322	307,834	246,700	54,018	6,296
2000	636,780	299,617	269,022	59,972	6,323
2001	557,228	264,537	234,832	50,324	5,525
2002	494,625	239,184	202,594	44,013	4,863

자료 : 통계청,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2003

## 2. 한국 출산력의 주요 지표

### 1) 출생아수 추이

인구증가요인인 출생, 동시에 태어난 출생집단(Birth Cohort)은 연령별 인구를 구성하게 된다. 6.25 전쟁이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하여 1960~70년 기간에는 연간 100만명이 태어났다. 연도별 출생아수는 가임 여자인구와 연령별 출산율로 설명된다. 즉 출산율이 동일하다면 가임여성이 많으면 출생일수가 많아지고 또는 가임여성이 동일하다면 출산율이 높아질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게 된다.

2000년 출생아수가 전년도에 비해 2만 여명 증가했는데 이는 밀레니엄 베이비붐 영향으로 1999년 출산이 늦춰지거나 2001년 출산을 앞당긴 결과로 특히, 둘째아 이상에서 증가한 것이다. 2001년, 2002년 계속 출생아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은 결혼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인다. 2002년 출생아수는 50만명으로 70년의 49%수준이고, 80년의 57%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출생아수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연간 50만명의 출생수를 유지하려면 해당연도 가임 여자인구를 감안해 볼 때 2002년 합계출산율 1.17에서 2005년 1.28, 2010년 1.38, 2030년 1.84, 2050년엔 2.52수준으로 높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주요 출산 연령인 20~34세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24세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1972년 해당여자인구 천명당 185명에서 2002년에는 27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며, 아직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25~29세 출산율도 92년의 189명의 59% 수준인 112명으로 떨어져 동일 연령층의 결혼건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30~34세 연령층에서 1987년을 고비로 다소 증가추이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출산연령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즉 20대의 결혼건수가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증가로 크게 줄어들어 20대 연령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30대 초반의 출산이 약간 증가하는 출산연령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3)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유배우 여자인구 천명당 20~24세는 1980년 404명에서 1990년 426명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 36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5~29세의 경우, 1980년 219명, 1995년 253명, 2000년에는 255명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표 3〉참조). 30~34세의 경우도 1985년을 고비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97명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결혼연령의 상승을

〈표 3〉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단위: 유배우 여자인구 천명당)

	1980	1985	1990	1995	2000
20-24	404	423	426	377	364
25-29	286	194	219	253	255
30-34	121	44	55	76	97
35-39	43	10	10	16	19
40-44	17	2	2	3	3
45-49	7	1	0	0	0
합계 유배우 출산율	4.39	3.37	3.56	3.63	3.69

자료: 한국의 인구, 통계청

반영하여 출산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풀이된다. 199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의 주된 요인은 유배우 출산율의 변동을 감안해 볼 때 결혼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 3.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

정부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 중 한 분야가 바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요인과 간접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직접요인으로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그리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들고 있다. 반면, 저출산 원인의 간접요인으로는 개인주의 가치관 및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해체현상을 들고 있다(강복화, 2003; 권태환 외 5인, 2000; 김승권, 2002, 2003; 김현미, 2001; 김혜수, 2003; 배현정, 2003; 백승홍, 2003; 서소정, 2004; 안명옥, 2004; 옥선화, 2003, 유애광, 김인숙, 2002; 양경희, 2004; 이삼식, 2002; 장혜경, 2003; 조계완, 2003; 천혜정, 2004; 최경수, 2003).

한국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해 보면, 초혼연령의 상승과 이혼율 증가 측면에서 결혼하는 사람의 과반수가 20-24세에 속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5-29세로 변화되었으며, 30-34세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이혼 연령은 30대 초반이며, 평균 결혼 4년정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OECD 2000년 보고서

에서 국내총생산(C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OECD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르는 한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각함을 단적으로 나타내주었다.

다음으로, 저출산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가치관(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미혼남녀들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통적 결혼가치관으로부터의 탈피정도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역시 전통적으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자녀는 투자라기보다는 소비라는 개념이 강해지면서, 그리고 자녀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이고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기투자를 증대시켜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현상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 및 자녀출산과 더불어 자녀양육은 여성에게 있어 자신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출산을 무기한 연기하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저출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가족해체현상 또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이는 곧 가족의 해체로 이어져 자녀출산의 기회를 박탈하여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 4. 한국의 저출산 정책

현재 한국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으로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정책'으로써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책, 결혼지원정책, 그리고 결혼친화적 주택정책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영역은 '출산기피요인 해소 정책'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가정과 직장의 병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강화로써 산전·후 휴가제도 정착화, 육아휴직제도 정착화,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자녀양육부담경감 정책'으로써 그 하위영역으로 육아지원정책, 가족수당제도, 자녀 양육비 세금감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거안정시책, 그리고 교통비 지원정책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인구자질

향상 정책'으로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산후관리, 그리고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가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교육·홍보정책으로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군인력 대상의 인구가족관련 교육, 그리고 국가주요시책의 광고사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정관련 단체지원, 그리고 대학구조개혁관련 정책이 있다. <표 4>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비

〈표 4〉 중앙정부의 저 출산 대비 인구정책 평가

영역	하위영역	세부정책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 정책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	혼인 및 자녀가치관의 정립		
	결혼지원정책	결혼비용 및 소득공제		
	결혼 친화적 주택정책	모기지론 주택자금 소득공제		
출산기피요인해소 정책	저소득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해산급여지원		
	가정과 직장의 병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산전·후 휴가제도 정착화 육아휴직제도 정착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자녀양육부담 경감 정책	육아지원정책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교육급여 지원 여성농어업인 운영센터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미혼모 가정 지원 입양지원 가정위탁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빈곤대물림 방지 희망전략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기타 아동건전육성사업 지원		
		가족수당제도	공무원의 가족수당	
		자녀 양육비 세금감면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거안정시책	공공주택 정책	
		교통비 지원정책	대중교통 이용 아동의 요금감면	
		인구자질향상정책	임신전 관리	복원수술 지원 불임가족의 지원
			산전관리	임산부 관리
산후관리	임산부 관리 선천성대사 이상 및 미숙아 관리 영유아 관리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출생성비 안정화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건강증진사업연구보고서

인구정책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보육지원 정책으로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정책은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산전관리, 임신부건강관리, 출산축하, 그리고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가 이에 포

함된다. 세 번째 저출산 정책의 영역은 교육·홍보정책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및 가족가치관 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장 대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책은 신혼부부건강검진, 가족계획 시술 부작용자 처치비 지원, 출산장려정책 연구수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5>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저 출산 대비 인구정책 평가

영역	하위영역	세부정책
보육지원정책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운영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인구자질 향상정책	산전관리	출산준비 및 임신부건강교실운영 라마즈 체조 교실 산전 태아이상 검사 중증장애인 해산보조비 지급 신생아 목욕교실
	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급 저소득 임신부 무료분만 태교음악 CD 보급
	출산축하	출산축하 안내엽서 발송 신생아 가정방문 출산축하금·축하용품 지급 출산수당 지급
교육·홍보정책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기형아검사 영유아 영양제 지급 태아검진비 지원 모유수유실 설치 및 운영 신생아 예방접종비 지원 성장기 어린이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 지원
	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건강한 가족생활 및 가족가치관 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사업장 대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기타정책		신혼부부건강검진 가족계획 시술 부작용자 처치비 지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생애주기별 특별지원금 지급 출산장려정책 연구수행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건강증진사업연구보고서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결혼연령기에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 그리고 미래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합계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층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조사원(가정학관련 전공학부생 및 대학원생 20명)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김영주 외 5인이 저출산 시대의 가정관리전략 연구(2004년)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임 가능한 시기라고 받아들여지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녀 중 가장 활발하게 임신가능성이 높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녀에게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769부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총 6개영역으로써 사회인구학적 영역, 결혼관 영역, 출산 및 자녀관 영역,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 영역, 현 저출산 관련정책에 대한 효율성 영역, 그리고 미래 저출산 관련정책에 대한 효율성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영역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형제·자매 수, 동거가족 유형, 가정 총 소득, 개인의 수입(용돈), 그리고 종교 등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혼관 영역에는 결혼에 대한 의무감,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의사, 결혼선택이유, 독신선택이유 등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출산 및 자녀관 영역은 자녀출산의 의무감, 자녀에 대한 생각, 미래 자녀출산 유무, 자녀의 필요성, 그리고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 견해차이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 중 미래 자녀출산 문항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질문하였다. 즉 미래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는 이상적인 자녀수, 임신시기와 그 이유, 그리고 출산계획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반면, 미래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피임계획과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 영역은 저출산 현상의 해결주체, 저출산 현상의 원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예측변화, 현재 시행중인 출산정책의 효율성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그리고 미래 시행계획인 출산정책의 효율성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출산 현상과 그 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인지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도와 백분율을 활용한 단순 기술적 통계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저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실태통계자료가 부실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이어감으로써 많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05년 2월 15일자). 즉 국가의 실태통계자료 부실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결혼관, 출산 및 자녀관, 저출산 현상의 일반적인 인지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6>에서 보 여주듯이 성별에서 남성 272명(36.9%), 여성 466명 (63.1%)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은 20대 초·중반이 480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중·후반 161명(20.9%)으로 많았다. 학 력에서는 대학생이 494명으로 66.8%를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118명으로 15.9%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557명(77.5%)으로 1위를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사무직 84명(11.7%), 전문기술직 42명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총소득 은 300만원~400만원미만이 169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300만원미만이 154명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은 50만원미만이 495명(62.4%)으로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 으로 50만원~100만원미만이 162명(22%)으로 나타났 다. 조사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은 기독교가 306명 (41.5%), 무교가 263명(35.6%), 천주교가 107명 (14.5%), 그리고 불교가 62명(8.4%)인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조사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동거가 427명 (57.8%)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사는 경우로써 132 명(17.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형 제자매 수는 2명이 436명(66.8%)로 가장 많았고, 3명 이 165명(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종합 해보면, 본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20초·중반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학 력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 가장 많으며, 직업은 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정 총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미만으로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소득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2명 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769

변인	문항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72	36.9
	여	466	63.1
형제 자매수	1명	49	6.8
	2명	436	60.4
	3명	165	22.9
	4명이상	72	10.0
학력	중졸 이하	2	0.3
	고등학교 졸업	55	7.4
	대학교 재학	494	66.8
	대학교 졸업	118	15.9
	대학원 재학	59	8.0
동거 가족	대학원 졸업	12	1.6
	부모님	97	13.1
	부모님, 형제자매	427	57.8
	혼자	132	17.9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27 46	5.0 6.2
가정 총소득	100 만원 미만	36	5.1
	100-200 만원 미만	115	16.2
	200-300 만원 미만	154	21.7
	300-400 만원 미만	169	23.8
	400-500 만원 미만	109	15.4
수입 또는 용돈	500 만원 이상	127	17.9
	50 만원 미만	495	62.4
	50-100 만원 미만	162	22.0
	100-200 만원 미만	69	9.4
	200-300 만원 미만	30	4.1
직업	300-400 만원 미만	12	1.6
	400-500 만원 미만	2	0.3
	500 만원 이상	2	0.3
	무직 / 주부	6	0.8
	학생	557	77.5
연령	판매, 서비스직	17	2.4
	생산직	2	0.3
	사무직	84	11.7
	전문, 기술직	42	5.8
	전문직	11	1.5
종교	10대 후반	70	9.1
	20대초, 중반	480	62.4
	20대 중, 후반	161	20.9
	30대 초, 중반	24	3.1
	30대 중, 후반	34	4.4
종교	기독교	306	41.5
	불교	62	8.4
	천주교	107	14.5
	없다	263	35.6

## 2. 결혼관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의 결혼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의무감,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계획여부, 결혼선택이유, 그리고 독신선택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표 7〉 참조).

결혼에 대한 의무감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결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302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독신인식이 증가되는 것과는 달리 의식적 측면에서는 결혼을 해야 될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하는 편

이 좋다'라는 주장이 398명(53.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혼계획의 여부에서도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692명(93.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균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의무감의 평균이 3.32, 결혼에 대한 인식이 3.80으로 대체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결혼기에 있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생의 동반자'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9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3%를 차지하였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5.5%의 응답자가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독신 생활을 선호해서'가 28.6%, '자아실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표 7〉 결혼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N=769	
결혼관	일반적 인지수준	빈도	백분율(%)
결혼에 대한 의무감	전혀 그렇지 않다	82	11.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2	20.5
	생각해 보지 않았다/모르겠다	80	10.8
	대체로 그렇다	302	40.8
	매우 그렇다	125	16.9
결혼에 대한 인식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	0.3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9	2.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13	28.7
	하는 편이 좋다	398	53.7
	반드시 해야 한다	109	14.7
결혼 계획 여부	예	692	93.5
	아니요	48	6.5
결혼의 선택 이유*	인생의 동반자	635	91.6
	나에게 도움	432	62.3
	결혼에 대한 동경심	92	13.3
	경제적	63	9.1
	부모님의 권유	17	2.5
	사회적성인	16	2.3
	사회관계 유리	58	8.4
	기타	63	9.1
독신 선택 이유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	10	20.4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4	8.2
	배우자가 없어서	4	8.2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6	12.2
	독신 생활 선호	14	28.6
	자아 실현의 걸림돌	13	26.5
	구속 받는 것이 싫어서	37	75.5
기타	4	8.2	

\* 중복응답문항

## 3.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자녀출산의 책임에 대해 본 조사대상자들의 44.5%인 329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185명인 25%의 응답자들은 자녀출산의 책임에 대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결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녀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많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먼저, 자녀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저출산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임신가능한 연령층에 속해있는 응답자들이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학계와 대중매체에서 출산장려의 식 캠페인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8.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응답이 27.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0%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자녀출산의 의지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높은 자녀출산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자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72.1%의 응답자가 '자녀는 배우자와의 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가 되보고 싶어서'라는 응답(34.2%)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나를 닮은 핏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30.3%)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표 8>참조). 출산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후 그들의 임신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이 22.7%를 차지하였다. 임신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결혼 후 2년 이내'가 4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 후 3년 이내'가 23.6%, 그리고 '결혼 후 1년 이내'가 16.8%를 차지하였다. 그 시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61.0%의 응답자가 '부부 둘만의 생활을 즐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해서'가 46.0%,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가 32.1%, 그리고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서'가 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자녀를 갖

<표 8>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N=769

출산 및 자녀관	일반적 인지수준	빈도	백분율(%)
자녀 출산의 책임	전혀 그렇지 않다	94	1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5	25.0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	8.7
	대체로 그렇다	329	44.5
자녀에 대한 생각	매우 그렇다	67	9.1
	자녀는 반드시 필요	430	58.2
	자녀가 없어도 무관	205	27.7
	아들은 꼭 필요	26	3.5
	딸은 꼭 필요	32	4.3
	입양을 해서라도 자녀 필요	17	2.3
자녀를 가질 생각	기타	29	3.9
	예	694	94.0
자녀가 필요한 이유	아니오	44	6.0
	배우자와의 사랑	485	72.1
	나를 닮은 핏줄이	204	30.3
	노후에 경제적 부양	28	4.2
	외로움 해소	144	21.4
	결혼 생활에 도움	161	23.9
	가계 계승	44	6.5
	부모가 되보고 싶어서	230	34.2
	기타	28	4.2

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리만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20.8%로 그 뒤를 이었다(<표 9>참조).

출산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시간활동의 제약' 때문이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48.8%,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36.2%,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도 34.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출산에 따른 부담감도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또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간

<표 9> 출산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의 가족계획 N=769

가족계획	가족계획 내용	빈도	백분율(%)
자녀의 수	1명	54	7.9
	2명	456	66.9
	3명	155	22.7
	4명 이상	17	2.5
임신시기	결혼 후 6개월 이내	18	2.6
	결혼 후 1년 이내	116	16.8
	결혼 후 2년 이내	316	45.7
	결혼 후 3년 이내	163	23.6
	결혼 후 4년 이내	60	8.7
	결혼 후 5년 이내	18	2.6
그 시기를 택한 이유*	부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위해	420	61.0
	직장 생활을 좀더 하고 싶어서	94	13.6
	결혼 생활 적응할 시간 필요	219	31.8
	경제적 준비할 시간 필요	317	46.0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 마련	37	5.4
	부모 역할 준비 시간 필요	221	32.1
	자녀가 필요해서	26	3.8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6	0.9
	기타	20	2.9
	출산 계획의 이유*	아들의 필요성	68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519	77.8
주변 사람 권유		123	18.4
노후에 대한 대리만족		90	13.5
종교적 이유		139	20.8
중요적 이유		48	7.2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113	16.9
사회적 책임감		118	17.7
기타	74	11.1	

\* 중복응답문항

〈표 10〉 출산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의 무자녀 선택이유 및 피임계획 N=769

무자녀선택 이유 및 피임계획	내 용	빈 도	백분율 (%)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경제적 부담	17	36.2
	육체적, 정신적 부담	22	48.8
	필요성 못 느낌	16	34.0
	시간 활동의 제약	25	53.2
	장애아 출산의 두려움	2	4.3
	몸매의 불만	4	8.5
	지구환경이나 인류 존속에 대한 회의	2	4.3
	기타	4	8.5
피임계획	정관 수술	8	17.8
	난관 수술	4	8.9
	콘돔	13	28.9
	루프	4	8.9
	먹는 피임약	4	8.9
	기타	12	26.7

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녀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이 28.9%로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가 26.7%를 차지 하였다(〈표 10〉참조).

#### 4.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 67.3%의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34.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자아실현 욕구' 때문이라는 응답이 29.5%로 3위를 차지하였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출산의 현상이 가임기에 있는 미혼남녀가 미래에 자녀의 필요성이 없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출산에 대한 의식변화보다는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의 해결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0%의 응답자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36.3%의 응답자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출산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예측되는 변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먼저 저출산으로 인해 예측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생활환경(교통, 인구, 환경 등)의 개선 측면,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의 감소 측면, 그리고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측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33.3%, 37.5%, 46.4%)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1.6%, 29.1%, 21.8%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예측되는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측면, 소비시장 위축 측면, 가족해체현상 증가 측면, 그리고 장래 노동력 부족 측면에 대해 국가 경쟁력 약화 측면과 장래 노동력 부족 측면에서는 응답자들의 39.6%와 35.9%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23.9%와 32.1%가 '매우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국가경쟁력과 노동력 부족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시장 위축 측면과 가족해체 현상 증가 측면에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가 35.7%와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33.0%와 21.4%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현상으로 예측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가 4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빠른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 전체인구 감소 문제와 복지비 지출 확대 및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가 40.3%와 43.0%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동의한다'가 29.4%와 21.1%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금 및 의료보험의 불이익 현상에 대해서는 35.1%의 응답자가 '대체로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1〉은 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지 수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

N=769

저출산 현상	일반적 인지수준		빈도	백분율(%)
저출산 현상의 원인	경제적 부담		493	67.3
	육체적, 정신적 부담		253	34.6
	필요성 못느낌		51	7.0
	시간 활동 제약		136	18.6
	장애아 출산		16	2.2
	출산 기피		80	10.9
	자아 실현 욕구		216	29.5
	초혼 연령 상승		52	7.1
	돌보이줄 사람 부족		92	12.6
	경제침체		65	8.9
불임		4	0.5	
기타		2	0.3	
저출산 현상의 해결 주제	정부에서 해결		384	52.0
	관심 없다		55	7.5
	곧 문제 해결		16	2.2
	개인의 의지		268	36.3
	기타		15	2.0
저출산으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	생활환경(교통, 인구, 환경)의 개선	전혀 동의하지않음	39	5.3
		대체로동의않음	183	24.9
		보통이다	232	31.6
		대체로 동의함	245	33.3
		매우 동의함	36	4.9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의 감소	전혀 동의하지않음	24	3.3
		대체로동의않음	144	19.6
		보통이다	213	29.1
		대체로 동의함	275	37.5
	자녀양육비의 감소	매우 동의함	77	10.5
		전혀 동의하지않음	23	3.2
		대체로동의않음	81	11.1
보통이다		159	21.8	
국가경쟁력의 약화	대체로 동의함	338	46.4	
	매우 동의함	128	17.6	
	전혀 동의하지않음	12	1.6	
	대체로동의않음	82	11.2	
저출산으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	보통이다	172	23.6
		대체로 동의함	289	39.6
		매우 동의함	174	23.9
		전혀 동의하지않음	23	3.1
		대체로동의않음	141	19.2
	소비시장의 위축	보통이다	242	33.0
		대체로 동의함	262	35.7
		매우 동의함	65	8.9
		전혀 동의하지않음	14	1.9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대체로동의않음	141	19.3
보통이다		156	21.4	
대체로 동의함		272	37.3	
매우 동의함		146	20.0	

〈표 11〉 계속

저출산 현상	일반적 인지수준		빈도	백분율(%)
저출산으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	장래 노동력 부족	전혀 동의하지않음	8	1.1
		대체로동의않음	69	9.5
		보통이다	157	21.5
		대체로 동의함	262	35.9
		매우 동의함	234	32.1
	인구고령화 문제	전혀 동의하지않음	10	1.4
		대체로동의않음	34	4.7
		보통이다	101	13.9
		대체로 동의함	282	38.9
		매우 동의함	298	41.1
	전체인구감소	전혀 동의하지않음	12	1.7
		대체로동의않음	52	7.2
		보통이다	156	21.5
		대체로 동의함	293	40.3
		매우 동의함	214	29.4
	복지비 지출확대 / 세금인상	전혀 동의하지않음	16	2.2
		대체로동의않음	65	8.9
		보통이다	182	24.8
		대체로 동의함	315	43.0
		매우 동의함	155	21.1
	연금 및 의료보험의 불이익 현상	전혀 동의하지않음	16	2.2
		대체로동의않음	90	12.3
		보통이다	237	32.3
		대체로 동의함	257	35.1
매우 동의함		133	18.1	

### 5. 현재 시행중인 출산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인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인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자녀출산 장려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출산 축하금 지급에 대해서는 32.5%가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39.2%의 응답자가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교육비 지원이나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에 대해서는 46.0%의 응답자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에 대해서는 34.5%의 응답자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에 대해서는 36.9%의 응답자가,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36.6%의 응답자가, 그리고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36.0%의 응답자가 대체로 그 효율성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복원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39.5%가 그 효율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0%가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22.7%가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해 출산 축하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현재 시행중인 자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한번쯤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표 13〉참조) 77.9%의 응답자가 '양육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55.3%가 '육아휴직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표 12〉 현재 시행중인 출산정책에 대한 효율성

N=769

출산정책	효율성 인지수준	빈도	백분율(%)
출산 축하금 지급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95	13.0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238	32.5
	보통임	219	29.9
	대체로 효과적임	132	18.0
	매우 효과적임	49	6.7
아파트 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6	4.9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20	16.4
	보통임	230	31.4
	대체로 효과적임	287	39.2
	매우 효과적임	60	8.2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42	5.7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70	9.5
	보통임	157	21.4
	대체로 효과적임	338	46.0
	매우 효과적임	128	17.4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6	4.9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01	13.7
	보통임	146	19.8
	대체로 효과적임	254	34.5
	매우 효과적임	199	27.0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2	4.4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01	13.8
	보통임	177	24.2
	대체로 효과적임	270	36.9
	매우 효과적임	151	20.7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복원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47	6.4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67	22.7
	보통임	290	39.5
	대체로 효과적임	169	23.0
	매우 효과적임	62	8.4
보육수당지급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2	4.3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95	12.9
	보통임	214	29.0
	대체로 효과적임	270	36.6
	매우 효과적임	126	17.1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확대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2	4.4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01	13.8
	보통임	215	29.3
	대체로 효과적임	264	36.0
	매우 효과적임	121	16.5

〈표 13〉 현재 시행중인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N=769

출산정책	빈도	백분율(%)
출산 축하금 지급	113	15.3
아파트 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300	40.7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575	77.9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408	55.3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188	25.5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복원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40	5.4
보육수당지급	209	28.3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확대	125	16.9
없음	24	3.3

6. 미래 출산정책에 대한 대안과 그 효율성에 대한 인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실업문제 해결과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4%와 36.9%가 그 효율성이 보통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회적 가족가치교육, 가족문화 만들기,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7%, 40.1%, 45.2%, 40.7%가 대체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가치 및 문화형성 등 일반인들의 태도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14)참조).

정부가 앞으로 시행했으며 하는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한번쯤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이 48.2%로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가족문화 만들기가 33.6%로 나타났다(표 15)참조).

〈표 14〉 미래 요구되는 출산정책 대안과 그 효율성에 대한 인지  
N=769

요구되는 출산 정책 대안	효율성 인지 수준	빈도	백분율 (%)
실업문제 해결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8	5.2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67	22.7
	보통임	275	37.4
	대체로 효과적임	213	29.0
	매우 효과적임	42	5.7
결혼문화 만들기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27	3.7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66	22.5
	보통임	357	48.4
	대체로 효과적임	169	22.9
	매우 효과적임	18	2.4
사회적 가족가치교육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29	3.9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23	16.7
	보통임	271	36.9
	대체로 효과적임	277	37.7
	매우 효과적임	35	4.8
가족문화 만들기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26	3.5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70	9.5
	보통임	275	37.2
	대체로 효과적임	296	40.1
	매우 효과적임	72	9.7
사회의 양성 평등문화정착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8	2.4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88	11.9
	보통임	205	27.8
	대체로 효과적임	333	45.2
	매우 효과적임	93	12.6
공교육 정상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21	2.8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06	14.4
	보통임	174	23.6
	대체로 효과적임	300	40.7
	매우 효과적임	136	18.5
아동수당 지급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42	5.7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114	15.5
	보통임	272	36.9
	대체로 효과적임	233	31.6
	매우 효과적임	76	10.3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출산의 현상과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대초·중반이 가장

〈표 15〉 미래 요구되는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N=769

요구되는 출산정책 대안	빈도	백분율(%)
실업문제 해결	194	26.3
결혼문화 만들기	92	12.5
사회적 가족가치교육	206	27.9
가족문화 만들기	248	33.6
사회의 양성평등문화정착	356	48.2
공교육 정상화	383	51.9
아동수당 도입	239	32.4
없음	50	6.8

많았고, 직업은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거가족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제·자매수는 2명이 많았으며, 가정의 총소득은 300-400만 원미만이 가장 많았고, 개인수입 또는 용돈으로는 50-100만원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결혼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한 결과, 결혼에 대한 의무감은 대체로 갖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고, 결혼에 대해서도 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혼계획여부에서도 미래 결혼을 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독신의 선택한 이유로는 독신 생활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녀출산의 책임감을 대체로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압도적인 비율의 응답자들이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3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옥선화(2003)의 연구결과 및 한명의 자녀를 가진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천혜정(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무자녀를 선택한 대상자들의 경우 무자녀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시간활동제약, 육체적·정신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자녀를 가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단산의 이유를 조사한 연구결과(천혜정, 2004)와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미혼과 기혼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조차를 출산하지 않고 또는 둘째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에 대해 일반인들이 얼마나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저출산 현상의 해결주체는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활환경의 개선과 생활비 감소, 그리고 자녀양육비 감소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예측되는 부정적인 변화(소비시장 위축, 가족해체 현상 증가, 장래 노동력 부족, 전체인구감소, 복지비 지출확대/세금인상,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의 불이익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저출산의 가장 부정적인 예측으로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옥선화, 2003)에서 저출산 현상의 결과 발생하는 문제로 장래 노동력 부족 다음으로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타난 결과와 다소 순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비 지출확대와 전체 인구감소는 동일하게 3위와 4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자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출산 축하금 지급만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외의 장려정책(주거지원 강화,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세제감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불임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보육수당 지급, 그리고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시행중인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세제감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출산정책의 대안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의 양성평등문화정착과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가족문화 만들기가 대체로 효과적

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제시한 정책들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조사대상자들은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의 양성평등문화정착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계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는 미혼남녀들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 중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감면에 대한 효율성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최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비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사회계층별에 따른 보육시설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한국에 2만 3천여 개의 보육시설이 존재지만 시설의 입장에서는 이용 아동이 부족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학부모들은 마땅히 보낼 만한 보육시설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의 다양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따라서 사회계층별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보육시설의 수나 운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미래 정부가 출산정책을 시행하기 원하는 대안 중 사회의 양성평등문화정착과 가족문화 만들기에 대한 효율성을 미혼남녀들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이 여성만의 부담으로 인식되어서는 출산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하는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형성과 결혼 및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전환 운동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나 서비스는 현재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이나 결혼교육, 그리고 가족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가 그 효과성을 심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내실화가 적극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산전산후 및 부성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고용인력 채용을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해 인건비 지원이나 세계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리라 본다. 최근 비정규직 인력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제도 적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출산정책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연구들이 의견제시적 논문의 성격을 띤 것과는 달리, 비록 빈도와 백분율의 단순통계방법을 활용하였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요인인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출산정책의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할 출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 김승권, 박상태, 송위섭, 은성호, 최병호(2000). 최근의 출산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특별좌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0, 4-15.
- 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장진경, 한은주(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제 -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110-122.
- 김승권(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49-73.
- 백승홍(200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소고. 국회보통권, 442, 25-27.
- 서소정(2004). 저출산 가정의 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시대의 가정관리전략", 15-26.
- 손홍숙(2004). 저출산과 가족지원서비스.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복지서비스의 과제", 66-89.
- 안명옥(2004).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대응과 가정정책.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3-34.
- 양정희(2004). 저출산과 모자보건서비스.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복지서비스의 과제", 1-26.
- 육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27-46.
- 유애광, 김인숙(2002). 한국의 출산 문화와 정책대안.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28, 39-61.
- 이춘석(2003).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3-24.
-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 추이와 예측. 통계연구, 8(1), 33-58.
- 정민자(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저출산·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35-71.
- 조선일보, 2004년 1월 7일자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기사.
- 중앙일보, 2005년 2월 15일자 통계부실과 국가정책관련 기사.

천혜정(2004). 저출산 가정의 출산 행동 및 배우자 애  
작.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시  
대의 가정관리전략”, 1-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 건강증진  
기급연구사업보고서.

(2005년 5월 9일 접수, 2005년 10월 4일 채택)